

“활기찬 경제 공정한사회”

2019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기획재정부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01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



0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03 규제자유특구
투자세액공제 확대



04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확대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01 내국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현행

3000달러



개정

5000달러



02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 확대

현행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규 승용차 교체



개정

15년 이상 노후차(전차종) 폐차 후
신규 승용차(경유차 제외) 교체



03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현행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개정

법인세 신고기한 3개월



혁신성장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01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현행

반도체, 5G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미래형자동차,
인공지능 등 173개 기술

이월공제기간 5년



개정

바이오배터기술,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추가

이월공제기간 10년



0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현행

31개 업종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사용



개정

서비스업 대폭 추가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사용



과다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순환성·사행성 업종 등 제외

0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연간 2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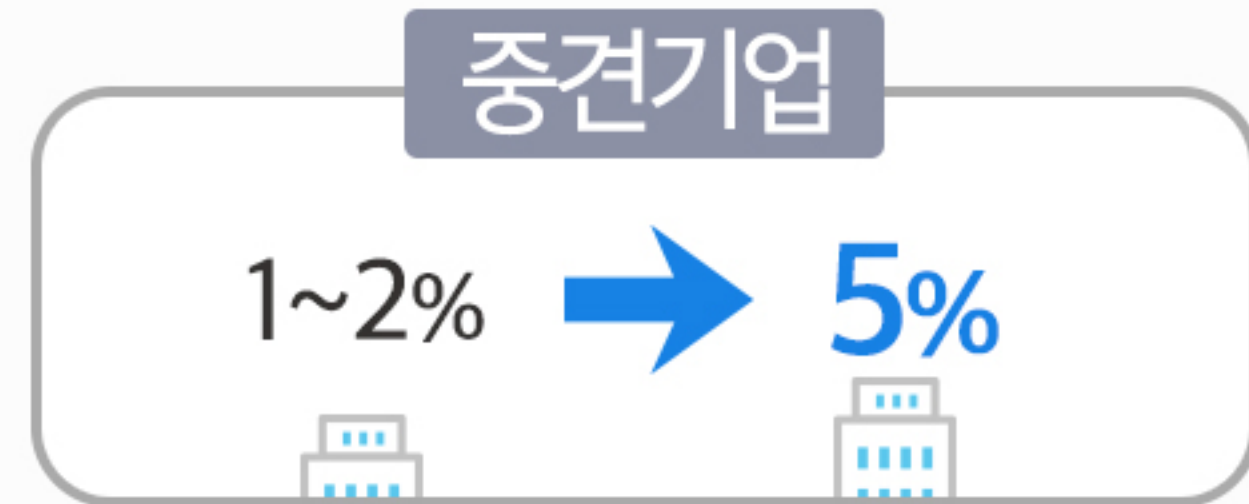
개정

연간 3천만원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01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0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 확대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0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세제지원 확대

	현행	개정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출산·육아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기업	동종업종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01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02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0세 이상자 연금계좌 납입한도



03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04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의제대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도 2년 연장됩니다.

- 01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우대 공제율 적용
- 02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공제한도 우대(+5%p)

의제대입세액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 A사장님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음식을 판매할 때, 농산물 등 구입금액에
업종별로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대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의제대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제조·가공음식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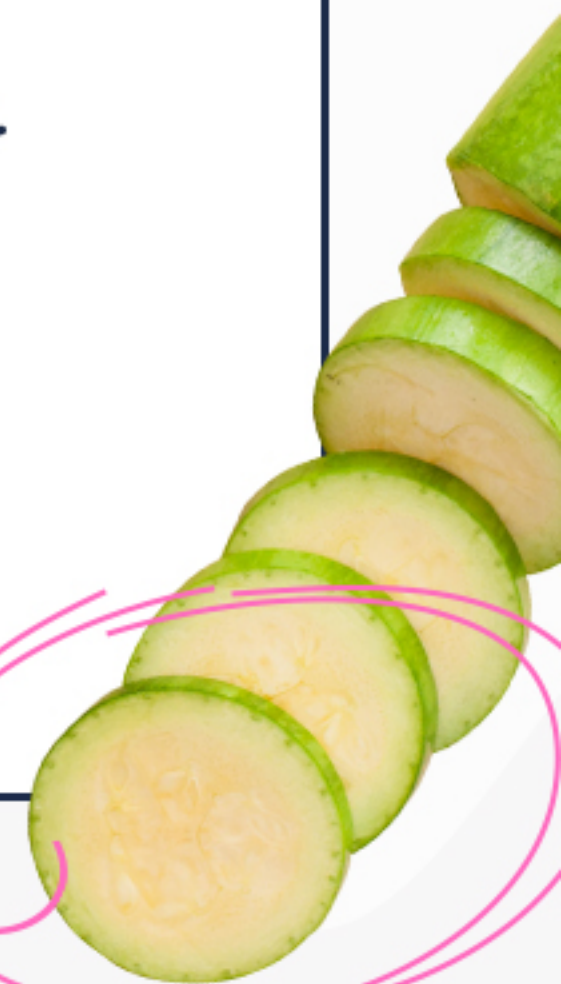
공제



공제



공제



공정경제로 가는 길,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01 공익법인 공익성·투명성 강화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 일원화(국세청)
- 의무지출·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

02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



0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2년 유예)

- 수도권 도시지역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5배→3배)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상가 겸용주택은 주택부분만 1주택으로 간주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01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세사업자 세무조사 입회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부당행위 조사공무원 교체·요구권 부여

0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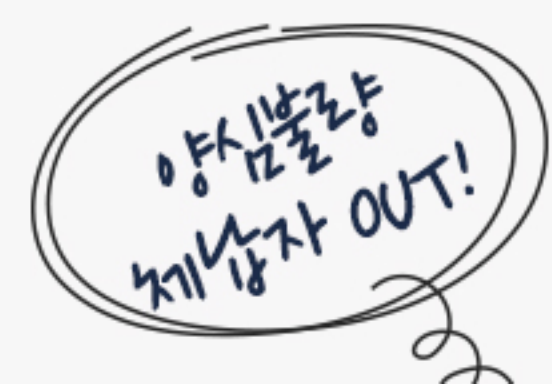
→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중소기업 할증배제 영구화

	일반기업	중소기업
할증률	20%	0%

03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한도없음 → 2000만원)

04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도입

*감치제는 '행정벌'로 법원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길

2019 세법개정안이
함께합니다.



기획재정부